



노사정 협의는 노동자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관련 기사 11면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2, 3면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8~9면

기획연재 ①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이
유지될까?

7면

악화되는 실업난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게 양보 강요

12면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11면

레닌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10면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김지윤

21대 총선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주당 핵심 인물들이 2004년 기억을 소환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낙연은 “그때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가능성”, “신중”, “완급” 조절 등을 언급하며 이해찬의 말에 동조했다. 사람들의 기대감을 어떻게든 낮추려는 의도다.

일부 언론들도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실패해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긴 것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스스로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지배세력과 타협하며 양보해, 대중의 불신을 산 결과이다.

이회창으로 표상되는 우파에 대한 반감과 개혁 열망 속에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됐다. 이 선거는 두 여중생의 미국 장갑차 압사로 표출된 미국 대외정책 반대 시위가 벌어지던 가운데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집권으로 개혁이 시작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 지지, 민영화 확대, 화물과 철도 등 노동자 파업에 경찰력 투입,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구속 등 기존의 정치 권력들이 벌여 온 일들이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고스란히 벌어졌다. 집권 초 80퍼센트에 이르던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비정규직 눈물 닦아주겠다’ 약속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2005년 4월 민주노총 집회

1년 만에 30퍼센트로 주저앉았다.

우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선거로 당선한 지 1년 조금 더 된 대통령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우파적 국회의원들이 탄핵하고, 그를 지지해 준 진보적 개혁 열망 대중의 기세를 약화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우익의 기대와는 달리 탄핵 시도는 역풍을 불러 왔다. 군부 독재의 잔당이자 원조 부패 세력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상당한 상황에서 탄핵 시도는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탄핵 반대 운동이 솟구쳤고 그 여파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으며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10석을 얻으며 약진했다.

뒷걸음질치기

1988년 총선 이래 처음으로 ‘여대야소’ 국회가 됐다. 곧 탄핵소추가 기각돼 노무현이 살아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될 것이라며 기대를 품었다. 노무현이 그동안 수구 세력 포위론을 펴며 개혁 후퇴의 책임을 보수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강도 개혁”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무현은 복귀 직후, 미국 대통령 조시 부시와의 교감 속에 이라크 파병 방침을 확정했고, 얼마 뒤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보복 피살됐다. 그런데도 두 달 뒤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다.

2003년 한 해에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12만 명 늘었지만, 당시 재경부 장관 이현재는 “노동 시장 유연성”, “불법 노사분규 엄정 대응”을 발표했다. 시장주의적 공격에 대한 노동자 저항을 염두에 둔 업포였다.

노무현은 “10배 남은 장사도 있다”면서 총선 공약이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없던 일로 했다. 2003년 아파트 분양가가 1997년보다 갑절로 뛰었는데도 말이다. 조중동이 노무현을 칭찬하고 나섰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노무현과 이회창·박근혜·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망갔던 재벌총수들이 줄이어 귀국해 노무현을 만났다. 노무현은 이들에게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제국주의 전쟁 지원에서 재벌총수 면죄부까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대변하려 한 지배계급의 이익에 충신했던 것이다.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은 어땠나?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자”던 노무현 정부는 국보법의 핵심을 유지하는 형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놓아 사람들을 실망시키더니, 최종적으로 글자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다른 ‘개혁 법안’들도 누더기

가 됐다.

2005년 6월 노무현은 한나라당에게 대연정을 제안했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가 거부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 자체가 개혁 염원 대중의 큰 실망을 자아냈다.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함께 비정규직 개악안·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동법 개악을 강행했고,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4번이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미FTA 추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반대운동 탄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도 벌어졌다.

결국 개혁 배신 정권에 대한 환멸과 반감이 하도 커서 대선은 치르나마나 한 상황이 됐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은 2002년 이회창과 비슷한 표를 얻어 당선됐다. 반면에 여당 소속 정동영은 노무현 득표의 절반만을 얻었다.

노동자 운동은 2004년에서 정치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나 동반자가 결코 아니고 단지 보수 세력이 발목을 잡아서 개혁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노동자의 친구를 자처한 친자본주의 정부를 믿었다가 노동자들은 큰 낭패를 겪었다. 노동계 정당들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노무현의 실패가 범진보진영의 실패라면서 여당과 ‘개혁 공조’를 내세우다 동반 추락해 결국 분열에까지 이른 쓰라린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노동계급 대중이 스스로 싸워야만 개혁을 얻어낼 수 있다.

※ 3면 2020년 총선 이후 관련 기사를 보라.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김지태·김승주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가장 최근 사고는 4월 21일 새벽 4시 경에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도장(페인트칠)을 마친 선박 블록을 이동시키려 ‘빅도어’(대형 문)를 열다가 참변을 당했다. 커다란 철문 여러 개가 수동 조작을 통해 미닫이식으로 움직이는데, 문과 문 사이에 끼이고 만 것이다. 노동자는 두개골 파열로 즉사했다.

사측은 피해 노동자를 탓하고 있다. 모든 문을 멈춘 뒤 작업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파렴치한 책임 전가다.

빅도어 협착 사고는 안전 조치와 투자 부족 때문에 조선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산재다. 사고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권고한 비상 정지 장치도 없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한 현대중공업 노조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부터 [노조] 대의원들은 [해당 작업을] 혼자 하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이나 외주화로 인원을 줄여 왔습니다.”

끼이고 추락하고

공장 전체를 지배하는 ‘빨리 빨리’ 분위기도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사측은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동자들을 압박해 왔다.

이것은 4월 16일 사고의 배경이기도 했다. 이날 사고를 당한 특수선 공정의 노동자는 잠수함 어뢰 발사대의 비좁은 공간에서 유압식 문을 정비하다가 문 사이에 목이 끼는 끔찍한 변을 당했다. 이 노동자는 현재 일주일째 의식 불명 상태다.(관련 기사: 319호 “현대중공업 줄잇는 중대재해:안전 조치 무시하고 사고 책임 증거 조작한 사측”)

해당 작업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원래 맡았던 일이 아니었다. 원래 이 작업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은 사측이 빨리 작업하라고 무리하게 재촉하자 반발하면서 퇴근했고, 사고를 당한 노



4월 21일 현대중공업 집회

동자는 그 빈 자리에 투입된 것이었다. 사측은 경험 없는 노동자를 갑자기 투입하고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안전 교육도 없었다.

이 사고들은 모두 사측의 비용 절감과 노동자 쥐어짜기가 낳은 비극이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육중한 철제 뚜껑에 끼이고, 높은 곳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기본적인

인력과 안전 설비가 부족한 탓이었다.

4월 22일에는 1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전기를 만들다 추락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던 현대중공업 계열사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비보도 전해졌다.

사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

4월 16일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가 사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 작업 중지 명령이나 안전 점검도 없었다.

4월 21일 사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현장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작업중지 명령만 내렸다.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공장 곳곳의 다른 빅도어들은 제외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개악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도 못 미치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고 시 작업중지 범위를 전체 작업에서 “사고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시켰다.

결국 노조는 사측에 항의해서 4월 23일 전체 공장 작업중지와 안전 점검

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하루짜리 대처가 매우 불충분한 요식행위로 끝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쟁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산재 사고들이 보여 주듯이, 사용자들은 안전 투자에 더욱 인색하게 굴면서 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화학 물질 규제 완화 요구에 호응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팔아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챙기려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도, 그로 인한 경제 위기도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사측의 무자비한 이윤 추구에 제동을 걸어 안전 투자를 강제해야 한다.

위험한 일터를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책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김문성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위기 대책의 비용만 85조 원이다. 4차까지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비용 규모도 150조 원에 이른다. 국가가 주도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자 대중의 불만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창출 일자리는 현재의 단기 공공일자리 같은 것인 듯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보전과 해고 금지 등은 빠져 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들어 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통계청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59세 일자리가 50만 개 가까이 줄었고, 임시 휴직자가 160만 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신규 채용 계획의 3분의 2가 취소됐다. 앞으로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서민 지원은 이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에 비해 충분치 않다. 문재인은 이날 2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안의 핵심은 국민 70퍼센트에게 가구별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안은 1차 추경에서 지원 받은 서민 일부를 배제한다. 정부는 총선 다음 날 이 안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추경안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민주당의 공약과 배치되는 데도 말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에 지급 대상(전 국민 지급이나, 70퍼센트 지급이나)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다. 이 갈등에서 홍남기는 기업주와 관료들, 친기업 언론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진보 진영의 홍남기 경질 요구가 정당한 이유이다.

결국 문재인이 모호한 지시로 책임을 회피한 상황에서 정세균의 중재로 당정이 절충안에 접근했다. 전 가구에 지급하되, 상위(30퍼센트) 소득자에게는 수령하지 않도록 유도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정세균은 이 안으로 여야가 먼저 합의해 오라 하고, 통합당은 당정이 구체 안부터 내놓으라며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어쨌든 이 안이 시행되면 조직 노동 계급에게도 수령 반납(자발적 기부?)의 압력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재정 건전성

사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안도 지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정부안과의 차이는 3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할 때마다 수십조 원씩 돈을 풀겠다고 발표하는 것에 견주면 매우 미약한 차이이다.

정부의 본심은 홍남기가 4월 20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말에 있

는 듯하다.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위기가 더 깊어졌을 때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려면 복지 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1997년 IMF 위기 때 기업 구제에만 160조 원을 썼다. 기업 살리기의 목적은 일자리 살리기가 아니었다. 당시 일자리를 잃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다.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그것을 갚아 회생하려고 인력 감축에 더 적극적이었다.

한편, 총선 때 전 국민 소득지원을 공약하고는 선거 후바로 이를 뒤집으려 한 것은 2012년 대선 후 박근혜가 보인 행태와 꼭 닮았다. 후보 시절 박근혜는 '전 국민 기초연금 지급'을 공약하고는 당선 직후, 취임도 하기 전에 이를 뒤집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은 선거 기간에 박근혜의 공약을 반대했다.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였다(재정 건전성 논리). 대중과의 약속은 쉽게 뒤집어도 한국 지배자들 내 (대체적) 합의를 지키는 데에는 일관성이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도 여권 인사들과 경제 관료들 사이에 엇박자가 났었다. 그때도 경제부총리 경질 요구가 있었지만 문재인은 김동연 편을 들었다. 최근에도 문재인은 홍남기에게 힘을 실어 왔다.

노동자들'끼리' 고통 분담

2차 추경안에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도 포함됐다. 소득 지원 예산 확보가 명목이다. 중앙행정기관 20곳의 연차휴가 보상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34곳의 연가 보상비도 집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한 서민 소득 지원마저 노동자 인건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위기 고통 분담과 서민 지원을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통합당도 총선 후 또 입장을 바꿨.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이제 공약 배신의 책임을 통합당의 말바꾸기 탓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통합당은 '당정 간 합의나 하고 오라'면서 간단히 무시했다. 민주당의 개혁 배신이 우파의 기를 살린다는 경고가 여기서도 일부 입증되는 듯하다.

정세균은 4월 17일과 18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민주노총 지도부를 각각 만났다. 노동계의 긴급 요구안을 들었지만 어느 요구에도 확답은 하지 않았다. 다만 노사정 합의의 모양새로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다.

노조와 진보정당 등 노동계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를 걸지만, 그것이 대중의 필요에 부응할 전망은 매우 어두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 이후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노사를 아우르는 노사정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 완화,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악을 통한 임금 억제 등을 추진해 왔고 추진하려고 한다.



배신 예고편 정부는 총선 다음날 부실한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 4월 21일 청와대 앞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총선 결과가 노동운동에 뜻하는 바

21대 총선 결과, 자본가 계급의 양당 구도가 강화됐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지난 1년간 진영논리를 구축해 온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두 당의 의석을 더하면 전체 의석의 94퍼센트로 역대 최고다. 두 당의 지역구 득표를 합하면 전체 투표의 90퍼센트를 넘는다.

무소속 당선자는 5명에 불과한데, 이들 모두 두 당(4명이 통합당)의 중진급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3당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유일하다. 덕분에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형식상으로 지역구와 비례 모두에서 의석을 얻은 유일한 정당이었다. 선거제의 허점과 주류 양당의 꼼수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 다음 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총선은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뤄졌지만, 양당정치 강화, 지역구도 부활, 선거개혁 외해 등 정치개혁의 후퇴라는 역사적 오점을 함께 남겼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책략으로만 민주당의 압승을 설명할 수는 없다. 여러 실증 자료가 증명하듯, 지역주의가 강화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리고 양당정치 강화와 선거제 개혁의 결과적 좌절은 미안하지만 정의당 자신의 책임도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선진국 해외 정부들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우파 야당의 헛발질과 너무 노골적인 반(反)서민성,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노동계 지도자들의 협조 기초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중도파 정당인 민주당이 좌우로 빠져나갈 표를 성공

적으로 가로채어 운 좋게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를 알기에 민주당은 총선 다음 날부터 "부자 몸조심" 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여야 상생, 협치를 강조한다.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개혁 약속을 남발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2004년 총선 직후에도 열린 우리당(민주당의 당시 이름)에서는 언행 조심과 여야 상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노무현 정부와 원내 다수 여당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남발해서가 아니라 개혁이 턱없이 부족하고 개혁을 배신해서 몰락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과반 여당이 된 지 1년 만에 한나라당에게 연립정부("대연정")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싫어서 찍어 줬는데, 그 당에 권력 분점을 제안하니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과거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세 차례의 전국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통합당이 싫은 청년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 민주당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촛불 운동의 여파가 아직 공식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의당도 표를 늘려 왔지만, 세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존재감은 주류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화돼 왔다. 우파의 득표력 회복, 진보정당의 존재감 약화 현상은 정의당과 민중당이 촛불의 여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노총을 비롯해 정의당과 민중당 등 대표적인 노동계 조직의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

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겠다는 전략을 추구해 온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노동계 지도자들의 이런 전략이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강화된(노동계 정당들에 맞서서도) 선거 결과 탓에 노동운동 안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혁을 성취하자는 전략에 추진력이 더해질 것 같다.

경제 위기 때는 계급 간 불평등도 깊어지고 계급 간 갈등이 불거져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된다. 특히, 위기에서 누구를 구할 것이냐,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이냐 하는 정치 문제가 첨예해진다. 노동자 운동은 정치적 양극화를 옅게 표현하고 투쟁으로 발전시킬지, 이를 사회적 대화, 즉 계급 간 타협으로 제어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지려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적 대화를 택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주에게도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번번이 시험대에서 미끄러져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노사정 대화를 공개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 전략에 반대해 온 혁명적 좌파에 대해서는 가당찮은 이유를 들어 연대 단절을 결정한 것으로 보건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알아서 투쟁 건설 방향으로 바뀌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기에 혁명적 좌파는 사회적 대화 같은 계급 타협(민중주의) 전략의 위험성(과 실패한 역사)을 설득하고 정치(노동계급 연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기층에서 개혁 염원 활동가들과의 공동 활동이 중요하다.

※ 2면 2004년 총선 기사를 보라.

코로나 팬데믹, 세계 곳곳의 차별과 그에 대한 저항

프랑스

인종차별적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4월 19일 파리에서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프랑스 경찰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경찰이 아랍 출신 청년을 압행 순찰차로 치어 중상을 입혀 시위에 불을 댕겼다.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 청년을 치려고 고의로 순찰차 문을 열었다.

“경찰은 신호등에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차 옆을 지날 때 경찰은 차 문을 갑자기 열었어요.

“고의로 그런 게 확실합니다.” 수백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했다. 시위대는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시위대 한 명이 현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외출 제한령 발

효 이래로 경찰은 아랍계와 무슬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경찰은 틈만 나면 우리를 체포하고 구타했습니다.”

이후 시위는 파리 다른 구역과 프랑스 다른 도시들로 번졌다.

언론인 타하 부하프스가 19일 시위를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영상은 부하프스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뒤이어 올린 것이었다.

부하프스는 경찰이 섬광수류탄을 자신에게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이동 제한령 불복을 이유로 벌금을 물렸다고 말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의 [경찰이] 이동 제한령을 위반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사망하자, 지방검찰청은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관 세 명이 아랍계 청년 무함마드 갑시를 통금 시간에 [이동 제한령을 위반했다며] 땅에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의 영상으로 찍혔다.

갑시는 경찰서로 연행됐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 안에서 갑시를 찍어 눌렀다.

인권 단체 국제인권연맹(FIDH) 프랑스 지부는 갑시의 죽음이 “빈민들이 어떻게 살해당하는지를 보여 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코로나19 대응 방해하다

4월 19일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이동 제한령을 완화하기 시작한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은 방해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상점 영업 재개를 허가하고 노동자 30퍼센트의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이는 이스라엘 상점주들이 이동 제한령 때문에 수익에 손실을 봤다며 도로를 점거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며 시위한 뒤 나온 방침이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시위 참가자들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팔

레스타인인들과 다른 아랍인들을 공격하고 이란을 위협하는 “전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에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수천 명이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이동 제한령에 항의해 행진하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행진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와 억압에 맞선 시위는 찾을 수 없었

다.

4월 14일 이스라엘 경찰은 예루살렘 동부 팔레스타인 정착촌 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소를 폐쇄했다. 이 검사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예루살렘 동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절반가량이 — 폐쇄된 검사소가 있는 — 실완 지구에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부의 병원들은 심각한 물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식량 부족으로 소요 사태 벌어지다

분노한 시위대 수백 명이 남아공 케이프타운 인근 빈민가 ‘미첼스 플레인’에서 경찰을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태워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경찰은 시위대를 저지하려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발사했다.

그 지역 주민인 로지 매튜스는 남아공 언론 <그라운드업>에 이렇게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량은 어디서 구합니까?”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전했다. “사람들은 배를 곯고 있어요, 각자 집에 비축한 생필품은 동났고, 일자리도 없고, 음식을 꾸러 갈 수도 없어요, 살 수가



남아공 빈민가 ‘미첼스 플레인’에서 식량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식량을 구하러 집에서 나온 사람들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케이프타운 내 게이즈빌에서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으로 몰려들어 금전등록기 다섯 대와 식료품을 가져갔다.

요하네스버그 내 빈민가 알렉산드라에서도 시위가 벌어졌

다.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식료를 전혀 비축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이동 제한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적절한 지원책은 전혀 없는 상태.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701호
번역 김준호

독일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가하는 고통은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크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코로나 위기로 독일에서도 이주민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 번역한 김아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이다.

코로나 위기 이후 독일에서 난민들의 상황은 거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경에 있는 난민들은 물론이고 독일 난민수용소 내의 난민들도 마찬가지다. 수용소에서는 비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이런 시설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재앙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튀링겐주(州)의 도시 줄(Suhl)에 위치한 수용시설에서는 한 난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500명이 격리됐다.

‘집에 머무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좌파들도 갈수록 방역의 주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런 기조를 지키기 어렵다. 난민에게는 머무를 수 있는 집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유일한 출구는 비좁고 억압적인 난민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독일에서 이주민들은 대체로 구조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의료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주민들은 인종 차별의 경험, 고문과 전쟁 트라우마

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주민들은 체류권이나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것은 이주민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체류권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은 병원을 가는 데 더 큰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주민들은 이주민이 아닌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 확률이 두 배나 높다. 코로나 위험군에 해당하는 64세 이상의 사람은 특히 그 위험이 높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이주민의 31.4퍼센트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비율은 11.5퍼센트다. 실직자의 절반 이상이 이주민 출신이다. 이들은 주로 자영업에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이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 위기가 심화된 이후 임금도 못 받고 가진 돈도 없이 살고 있는 불안정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주민들은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문화과학자 유디스 폴렌버거는 오스트리아 주간 신문 <팔터>(Der Falter)에서 사회적 불균

형에 주목하며 “가정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25퍼센트 내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반면, 소득 상위 25퍼센트 내 그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독일 국적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다음 3개의 직업군에서 일한다. 청소(31.9퍼센트), 식품 생산·가공(31.7퍼센트), 축산·농업(31.1퍼센트). 이 직업군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서 중요한 직업군들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외국인 노동자는 독일 노동자보다 최대 44퍼센트 임금을 적게 받는다. 한스 뢰클러 재단 [독일의 친노조 성향의 사회경제 연구소]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출신 간호사는 이주민 출신이 아닌 동료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은 난민을 병균 전파자로 묘사하려고 노력해 왔다. 코로나 위기는 중국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공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AfD는 이주민 입국 금지와 국경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이주민들은 코로나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불평등은 이런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장호중 의사

문재인 정부가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이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등교 시기도 따져보는 중이다. 대학들은 속속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 곳곳의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해 감염 확산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진자 통계는 과거의 추세를 보여 줄 뿐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방역 완화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장도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총선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3.3퍼센트가 거리두기 완화에 반대했다.

이런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 완치 판정 후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재확진자가 170명을 넘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이 8000명을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항체 생성률이 매우 낮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악명 높은 '집단면역' 전략이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뜻이다.

방역에 가장 큰 어려움을 낳는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도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대본은 3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중 20퍼센트 정도는 퇴원할 때까지도 무증상 상태인 경우들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인 신천지 교회 신자들의 경우에도 (검사 당시) 확진자의 4분의 3은 증상이 없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도 "감염자의 25~50퍼센트가 무증상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스로 병원을 찾은 유증상자를 출발점으로 삼아 접촉자를 확인해 나가는 방식의 방역 절차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유럽의 감염자 증가세가 줄고 있지만, 브라질을 비롯한 남반구와 러시아, 신흥국들이 새로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지배자들 모두 경제 불황을 걱정하며 방역 완화를 공언하고 있어 수억 명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유행처럼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번갈아 유행이 반복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의 변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는"(질병관리본부) 조건에서도 감염이 어느 정도 통제돼 온 것은 사람들이 정부의 실제 조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의의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현 상황이 '폭풍 전 고요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해고 금지, 소득 지원 등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4월 9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염 위험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처벌 엄포와 개인정보 공개 등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도 상당했다.

이에 비하면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는 일부에만 적용됐다. 대다수 산업이 평소처럼 가동됐는데, 작업 현장과 출퇴근 교통 등은 '고강도'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사실 운이 좋았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가 대중의 보건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은 정부 자신의 모순된 언사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발표 이전에도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며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는데, 정작 최근 지침은 정반대로 내렸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거리두기 '유지'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순전히 훗날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다시 늘면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 탓을 하려는 것이다.

재확진, 무증상, 돌연변이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방역을 하던 생산 현장에서 사실상 빗장을 풀어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 차질을 만회하려고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다.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안전 조치를 생략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최근 연이은 산재 사고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물며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치료제, 백신, 항체(면역 획득)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고, 재확산은 필연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 일본에서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채

집에서 앓다 숨지는 환자들이 부지기수다. 이 선진국들은 중국·한국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조차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대형 참사가 벌어져 여러 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이런 안이한 대처가 반복되도록 뒤서는 안 된다. 다가올 재확산이 대형 참사가 되지 않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고 충분한 방역 준비해야 한다.

해고를 금지하고,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권고가 아니라)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비필수 분야 종사자들의 생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

필수 분야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등을 충분히 지급하고, 인력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감염 위험을 낮춰야 한다. 이로 인해 소득이 줄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기업주들을 강제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키고 대중 교통을 확대해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

재확산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민간병원 인수 포함), 의료 인력 등을 충원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난 지원금 지급조차 미적당 정도로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다. 적자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등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위기를 겪는 상황을 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문재인은 총선 전부터 "포스트 코로나", "변화를 기회로" 운운하며 경제 활성화에 군불을 때 왔다. 심지어 이참에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4월 8일에 화학물질 안전규제 완화 계획, 4월 21일에는 바이오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로 이중의 고통에 빠져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극도로 인색하다. 재정을 아껴야 한다며 1회 지급에 지나지 않는 재난지원금 지급도 망설이고 있다. 해고와 소득 절벽에도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공무원 임금 동결 시도에서 보듯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기업주들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에 추진하던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체계 개악 등의 조치도 강행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고 '사회적 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국내에서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재확산과 경제 위기로 인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계급의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수시 검사,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편,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수시 표본검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최근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사례를 보며 취한 조치로 보인다. 물론 이주노동자들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선 안 된다. 제대로 된 검사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학교와 공장, 사무실 등에서 거리두기를 유지·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개학을 서두른 것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개학 이틀 만에 다시 휴학을 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한 번 퍼져 나간 바이러스는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방역 물품, 검사비, 주거 시설, 소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은 이들의 주거 환경 등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해고가 늘고 소득이 줄면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검사만 반복하려 한다. 이러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방역 완화로 벌어진 일을 이주노동자 탓하며 속죄양 삼기를 시도할 법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와 소득 지원, 무상 검사와 제대로 된 격리 시설 등이 제공돼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역사 속 감염병: 1918~1920 '스페인 독감'
- ★ 정의당의 선거 성적과 진로 논쟁
- ★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 ★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임금 삭감 시도 비판

기획연재: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 ①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개입을 늘리고 국유화를 거론하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주목 받은 베니 샌더스의 도전도 대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이에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개재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기존의 국가 기구를 인수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사회주의에 노동자 혁명이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노동자 혁명은 옛 (자본주의) 국가를 해체하고 그 대신에 노동자 국가를 세우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국가는 무엇인가? 노동자 국가는 무엇에서 생겨나는가?

다행히도 우리는 역사(주로 국제적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과거 투쟁들에서 노동자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시도는 대개 옛 질서에 맞서기 위해 구축된 조직들로부터 시작됐고, 그러한 조직들은 옛 질서가 위태로울 때 그 전복을 계획했다. 그러한 조직들은 혁명 후에 더 나아가, 사회를 운영하는 과업을 떠맡았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은 단순히 개별 같은 것이 아니다. 혁명은 무장 봉기의 순간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일종의 과정, 곧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조직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905년 러시아 혁명 동안 인쇄업 사용자들에 맞서 조직되기 시작한 파업 위원회는 더 보편적인 저항들을 촉발하고 다른 노동계급 부분들을 두루 포괄하는 노동자 소비에트(평의회)로 발전했다. 그 후 노동자 평의회는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권력을 갖기 위해 정부에 도전했다.

1871년 파리 코뮌도 노동자 국가를 세우려는 비슷한 시도였다.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이 코뮌은 파리의 여러 구에서 보통 선거로 선출된 자치 위원회로 이뤄졌다. 이 위원회는 책임을 졌고, 특히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었다. 그 위원회의 성원들 대부분은 당연히 노동자 아니면 노동계급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도구였던 경찰은 자신의 정치적 성격을 박탈당했고, 책임을 졌고,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코뮌의 도구로 변모했다. ... 코뮌의 공무원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평균 임금만을 받았다. 국가 고위층이 가졌던 특권과 재량은 그러한 고위층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다. ... 상비군과 경찰 그리고 옛 정부의 무장 기구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후 코뮌은 곧장 정신적 억압 기구였던 성직자들의 권력을 깨부렸다. ... 사법 기구들은 기반적인 독립성을 상



1920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 토론했고 결정하는 무일로프 공장 노동자들

실했고 ... 이들도 선출되고, 책임을 지고, 소환될 수 있게 됐다.

1917년 러시아에서 다시 나타난 노동자 평의회는 코뮌보다 훨씬 진보한 형태의 노동계급 조직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촉발하고 다른 노동계급 부분들을 두루 포괄하는 노동자 소비에트(평의회)로 발전했다. 그 후 노동자 평의회는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권력을 갖기 위해 정부에 도전했다.

1871년 파리 코뮌도 노동자 국가를 세우려는 비슷한 시도였다.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이 코뮌은 파리의 여러 구에서 보통 선거로 선출된 자치 위원회로 이뤄졌다. 이 위원회는 책임을 졌고, 특히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었다. 그 위원회의 성원들 대부분은 당연히 노동자 아니면 노동계급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도구였던 경찰은 자신의 정치적 성격을 박탈당했고, 책임을 졌고,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코뮌의 도구로 변모했다. ... 코뮌의 공무원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평균 임금만을 받았다. 국가 고위층이 가졌던 특권과 재량은 그러한 고위층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다. ... 상비군과 경찰 그리고 옛 정부의 무장 기구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후 코뮌은 곧장 정신적 억압 기구였던 성직자들의 권력을 깨부렸다. ... 사법 기구들은 기반적인 독립성을 상

라 점진적으로 소멸한다.

노동자 혁명은 또한 경제를 변모시키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를 지배하는 사상은 여전히 신자유주의로, 경제적 자유와 자유 시장을 지지하는 형태의 자유주의이다. 자유 시장 사상에 따르면, 무엇을 언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들이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이윤 획득이다. 치명물이나 감염률이 높은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것이 이윤을 더 많이 얻게 해 준다. 기업은 고급 승용차를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품목을 만들어도 기업은 그것이 잘 팔리라는 확신을 갖기가 힘들다. 다른 경쟁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데 낭비되는 것 외에도, 고급 승용차가 팔리지 않고 그냥 창고에 남아 있게 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보편화되면 (파인 생산이라고 한다)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려면 생산은 계획되어야 한다.

경제를 계획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별로 인기가 없다. 사람들은 계획이 옛 소련이나 현 북한의 확실성과 우궁을 결합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국가들은 총합 경제의 케리커처(회화)에 불과하다. 서구처럼 그곳 노동자들도 전혀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했다(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말이다.



호텔병이 텅텅 비어도 노숙인들은 오갈데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진정한 재화 선택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 어떤 상표의 초콜릿이나 비스킷을 살지든 소비자가 결정하는 데에 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가 구매의 다른 모든 사항을 세세히 계획하는 것은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분야의 지출을 우선해야 하는지, 또 얼마만한 규모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병원을 더 짓고 있고, 홀플러스도, 롯데마트도, GS슈퍼마켓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들은 모두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 계획들은 하나를 통일시키는 것은 다양성과 선택을 침해하는 게 결코 아니다. 파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상품들이 이 모든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것이다. 이 다섯 개 슈퍼마켓에서 쓸데없이 중복돼 낭비되는 자원을 사용하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오래된 주장 하나는 노동자들이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경영인과 언론이 퍼뜨리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상투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가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런 주장만큼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 경영인(특히, 전문 경영인)들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이내 멈춰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어떤 경영자보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집단적으로는 생산 과정 전체를 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생산 라인에 설치된 건의함에 붙여진 의견들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특히 품질관리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지식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일부 경영자들과 중·하급 관리자들은 승진하기 전에 노동자들이었다. 상품이 생산되는 방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그들이 경영자가 된 후가 아니라 그들이 노동자였을 때 얻은 것이다. 통상 이런 사람들이 경영자나 관리자가 되면, 이런 것과 다른 쓸모 없는 것들을 경영 학습 과정에서 배운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압박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더 오래 부러먹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세상의 어떤 공장과 사무실도 거기 노동자들이 일을 맡춘다면 운영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할 때 어떤 경영자도 차를 생산해 내거나, 쓰레기를 치우거나, 지하철이 다니게 할 수 없다.

전면적 노동자통제

일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하려다도, 곧 설사 노동자들이 자신의 부분적인 일터를 사용하 없이 운영할 수는 있다 해도 전체 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복잡한 일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어떻게 노동자들이 도로나 철도를 놓을 것인지 말지, 또 보건의로 분야와 교육 분야의 우선순위 사항들을 조정할 것인지, 식료품과 주택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장은, 그러한 커다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자연스레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경영자와 관리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한편, 대통령과 정부 관리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실패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든 것은 시장 때문이라고 한다. 2005년에 당시 대통령 두루먼이 말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어



노동자들은 어느 경영자들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안다

찌 보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모두 진실의 일면을 뽐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시장(시장경제)의 포로라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만약 시장이 적대적으로 돌아서도 자기들은 맨 나중에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잘 안다. 언제나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노동조건이 맨 먼저 타격을 받는다. 더구나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이렇게 되게 만든다.

그럼에도 시장 경쟁과 이윤 창출 체제에 속하게 되면 체제의 수혜자들도 그 체제의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립된 노동자 통제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완벽하게 기계·설비류를 가동할 수 있는 데도, 가져없는 임금 삭감을 단행하고 있는 냉혹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에 노동자들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경영자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노동자 자자관리로 잘 알려진 청주 우진교통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이어지자 "빠를 꺾는 자구책으로" 노동자 스스로 임금을 30퍼센트 삭감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재정 지원 없이는 더는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사회를 운영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단번에 장악해야 한다. 오직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것을 통해 서민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업 내부 체인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실행하며 보완할 때, 또 사회의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에는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에너지와 사용되지 않았던 기술을 그리고 억압됐던 상상력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착취와 차별과 극소수의 지배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집단적 과업에 사용될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

만약 노동자들이 사회 전체를 장악한다면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장보다 더 잘 조직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로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수백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줄을 서거나, 보건료와 교육은 형편없는 데도 첨단 무기 구입에 해마다 몇 조 원을 낭비하거나, 빈곤선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 데도 광고에 11조 원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이 돈만으로도 빈곤층 사람 개개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직 이윤을 추출하고 그 이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경찰과 교도소, 군대를 갖는 데만 관심이 있는 지배계급에 맡겨져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일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가 경제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토의하고 투표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공장과 사무실과 병원과 학교 등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 권력은 이제 100년이 넘는 사회민주주의 정부 경험과 전혀 다르다.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집권 전에 했던 약속들이 기업과 국가 공직, 언론을 지배하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자들의 방해에 의해 좌절되는 일을 방관했다.

반면 노동자들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실행하며 보완할 때, 또 사회의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에는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에너지와 사용되지 않았던 기술을 그리고 억압됐던 상상력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착취와 차별과 극소수의 지배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집단적 과업에 사용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국제적 문제임에도 국가적 개별 대응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도 늘 그랬듯이 갈팡지팡하며 내부적으로 분열 된 채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때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도에 의지했다.

2007~2009년 국제 금융 위기까지만 해도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분명 그런 지도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구실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대체할 역량이 없다.

미국은 유일하게 만만찮은 경쟁국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모순적인 효과를 냈다. 코로나19의 발생자인 후베이성 지방정부들이

초동 대응에 더디고 사태를 은폐하려 한 탓에 중국은 체면을 크게 구겼다. 반면, 중국 중앙정부는 뒤늦게라도 감염자 추적과 검사를 바탕으로 봉쇄령을 강경하게 추진해 대유행을 잠재웠다. 중국 중앙정부가 사태를 은폐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대응은 트럼프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비정하고 서투른 대응에 비하면 나아 보인다.

중국 공식 선전 기구는 이 차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가 바쁘다. 한편, 중국은 의료 물자를 전 세계에 수출하여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국가에 속해 있는지 자랑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와 영국·호주 정부 같은 그 동맹들을 자극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기원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후대 역사가들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돌아보며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자본주의 패권 국가로 등극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미국 패권의 두 가지 토대는 달러와 팬데믹(미국 국방부, 즉 군사력)이다. 현재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달러다. 미국은 여전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다. 미국의 거대 은행들

은 국제 금융시장을 지배하며, 국제 금융시장을 추동하는 것은 달러화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효과적이고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그 나라 기업이 신용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신용은 주로 달러화로 돼 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초래한 금융 패닉 모두에서 달러화로의 도피가 두드러졌다. 기업들과 국가들은 수입과 부채 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붙잡으려 했다. 이들은 달러를 더 확보하려고 자산을 팔았다. 심지어 매우 안전한 미국 국제 같은 자산까지도 말이다.

이 두 위기 모두에서 미국 국가가 개입해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가 개입하는 형태였다 — 이런 달러를 공급했다. 3월 연방준비제도는 주요 5개국 중앙은행에 제공한 통화 스와프 협정[자국 통화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을 9개국 중앙은행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청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았다. 중국이 달러가 필요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08년 국제 금융 위기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국유 은행에 대출을 크게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대규모 파밍 투자와 부동산 거품이 발생했고, 거대 국유 기업과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았다.

중국 정부는 서서히 악성 부채를 줄이려 하는 중이다. 이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일부 서방 정부보다 훨씬 소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낸 이유다.

그러나 이 부채 중에는 달러화 부채도 있고 위안화 부채도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 확장을 위해 달러를 빌리는 동시에 수익을 중국으로 가져와 국내적 목적을 위해 위안화로 환전했다."

2021년이 되면 중국 기업들이 진 1100억 달러 상당의 달러화 부채의 만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트럼프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 기구가 여전히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안정적이지는 않다.

베이징대 소속 경제학자 마이클 패티스가 말했듯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면서, 미국은 갈수록 세계 중앙은행 구실을 하는 막중한 부담을 떠맡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호 / 번역 최병현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마이크 데이비스(오른쪽 첫 번째 사진)는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발전 때문이라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또한 극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과 그들을 뺀 나머지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설득력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책갈피, 2020)의 공저자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돌베개, 2008), 《슬럼, 지구를 뒤덮다》(돌베개, 2007),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이후, 2008년),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비평사, 1994) 등이 있다.

우리 문 앞에 마침내 발을 들여놓은 괴물은 실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 괴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최소한 서류상으로, 거의 매년 과학계는 당면한 전염병 위기에 대해 세계 지배자들에게 경고했다.

민간 제약회사들이 [전염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류 생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더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국제화된 생산에서 10억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완전한 잉여 인력으로서 존재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도심에 거주하며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이 비공식 부문만이 유일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둘째, 기후변화다. 자본주의는 완전히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로 인류를 내몰았는데, 기후변화가 질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며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을 옮기는 주요 곤충들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에서 말라리아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거의 불가피하다.

셋째, 자본주의는 지금 우리가 겪는 종류의 대유행을 직접적으로 촉발하고 또한 그 원인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저 하나의 대유행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대유행과 신종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이런 새로운 전염병들을 생산했다.

자본주의로 인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서로 엄격히 분리된 채 살아가던 이전 시대의 자연적·사회적 경계가 허물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박쥐에서 발견된다. 박쥐는 극도로 폐쇄적인 동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박쥐나 박쥐에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과 접촉하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를 촉진한 원동력은 다국적 벌목회사들이, 예컨대 아마존 같은 열대



림을 대규모로 파괴해 온 과정이었다.

가금류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의 산업화와 공장형 축산도 있다.

일 년에 닭 100만 마리를 처분하는 가금류 공장들을 살펴보자. 이 공장들은 마치 바이러스감염증을 일으키는 입자가속기 같다.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퍼뜨리는 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기계를 발명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이다. 한 부류는 영양상태가 좋고, 대체로 건강하며, 의약품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다른 부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상당 부분 파괴된 의료체계에 의존해야 한다.

부채

이들이 의존하는 의료체계는 부채, 구조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여러 국가에 강요한 공공지출 삭감과 공공 서비스 민영화로 인해 파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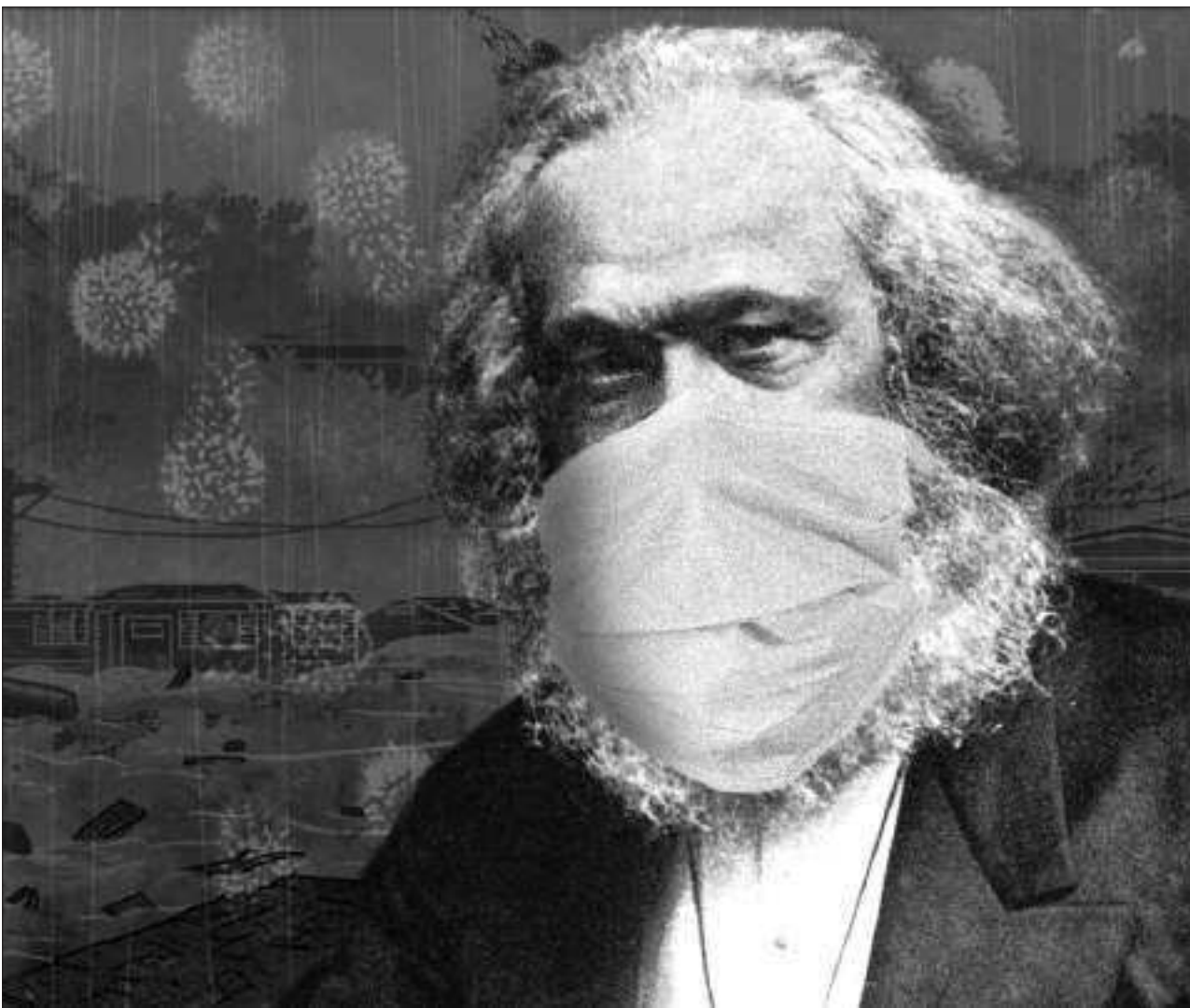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위생시설 부족 문제는 사람들을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단연 가장 큰 원인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고 한 시간마다 비누로 손을 씻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금 남반구 빈민가에서 세계적 유행병이 폭발하면서 그로 인해 진정한 학살이 벌어질 위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현재 상황을 우주에서 소행성이 떨어져 지구와 충돌한다는 식의 자연재해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만들어진 대유행이다. 과거 자본주의 체제는 국제화로 인해 질병 탐지와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조금이나마 해야 했다.

이는 무역을 보호하고 북반구 제국주의 국가들에 사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기 빅토리아 제국주의 시대에 위생 관리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이 학술대회들이 명시하는 목적은 감염병 통제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48년 록펠러 재단에 의해 설립되고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중요한 구실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WHO의 본래 주된 관심사는 과일판 매기업인 유나이티드프루트컴퍼니에



코로나바이러스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의 타당성을 강화시켰다

서 일하는 농장 노동자들과 칠레 질산 광산에서 일하는 광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다. WHO는 백신으로 병원균 자체를 겨냥해 질병을 퇴치하고자 했다. 천연두를 제거하는 데 이런 방식은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그 외 다른 질병은 퇴치에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다른 대안적 전통이 존재한다. 바로 빈곤, 위생시설 부족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해결하려는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모두 과거지사고,] 오늘날에는 질병 감지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와 공조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WHO는 사실상 와해됐다. 현재 이 기구가 하는 구실은 매우 미미하다. WHO는 항상 자금 부족에 시달렸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공언한 만큼 WHO에 자금을 충분히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WHO는 주로 강대국에 로비하고 자선사업가들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의 80퍼센트를 채운다. 이 때문에 WHO는 미국, 중국, 자선사업가들한테 끊임없이 아부하고 간청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4~5달 동안 이 점이 자못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명백히 드러났다.

국제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질병 대부분을 감지하는 구실을 해 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와해됐다.

CDC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현재 사용하는, 한 독일 제약회사가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DC는 자체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오류가 발견됐고 잘못된 결과를 내놓았다.

CDC는 우파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주는 자금에 의존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CDC 예산을 무참히 삭감해 버렸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 중 하나였다.

트럼프는 취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염병 관리 조직들을 허물고 관련 정책들을 뒤엎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미국을 전 세계에서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말하던 그날, 《뉴욕 타임스 매거진》은 수술용 마스크를 집에서 손수 바느질하는 방법을 지면에 소개했다.

또한 이번 위기는 국제적 위기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환상은 완전한 위기에 빠졌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이 구호의 손길을 뻗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오히려 필수 보급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뽐내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했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 갖지 못했으며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와 더 많은 정치적 위신이다.

리더십

트럼프는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 혹은 인도주의적 대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포기했다. 당연히 이탈리아는 핵심적 구호를 제공하는 데 앞장선 중국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역량을 동원해 필수적인 의료장비를 제공했다. 세계 도처의 구호 현장에 중국은 있었지만 유럽과 미국은 실종됐다.

17세기에 유행한 전염병들은, 특히 이탈리아에서 지중해 중심 경제가 북부 대서양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가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헤게모니에서 중국 헤게모니로

넘어가는 변화를 가속하는 계기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국수주의적인 나머지 대다수의 세계 지도자들과 국수주의자들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다. 국제적 협업은 붕괴했다.

국제적 생산이 회복되려면 국제 질병관리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재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노력은 사람들을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여저 보면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은 무시한 채 병원균을 공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런 접근법을 따르더라도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는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민간부문은 [백신 등의 개발 용도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서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생물학적 설계와 과학 발전의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약산업이 더는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필수 의약품 생산은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정당화해 줬는데 말이다.

오늘날 제약산업은 더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지 않고, 백신을 만드는 경우도 많지 않다. 국제적 [슈퍼 박테리아 창궐] 위기에 직면해 새 세대 항생제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손에 쥐고 그것을 홍보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

제약산업은 의료혁명과 과학혁명의 발전에 족쇄가 됐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높게 매기고 복제 약품 보급을 막기 위한 엄청난 정치적 로비를 펼치는 데 몰두했다.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하려는 트럼프

소피 스콰이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60일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의 방역 실패로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이지만 이 책임을 이주민에 떠넘기겠다는 인종차별적 술책이다.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대중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심산일 것이다.

한편,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데 맞선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을 휩쓸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 활동 재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많은 부문의 기업들이 5월 1일까지는 영업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많은 목숨을 대가로 치르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도 많다.

4월 13일, 경찰은 뉴저지주 요양원에 방치된 시신 17구를 발견했다. 이 시신들은 최대 4구를 보관할 수 있는 영안실에 쏘여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라고 주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4월 17일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여러 글을 올려, 주로 민주당 주지사들을 겨냥해 주(州) 수도들에서 이동 제한령 즉각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한 소규모 국우 단체들을 사실상 고무했다.

시위대 대다수는 트럼프 지지 물품들을 착용했다. 돌격소총을 든 자들도 있었다. 몇몇은 나치 휘장을 내걸거나 [인종차별적 극우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미국 반자본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은 미시건주 국우 시위 소식을 보도하며 이렇게 썼다. “아마도 더 의미심장한 점은,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진 출처: 데일리안

방역 완화에다가 이민 금지령까지 내리는 트럼프

이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 시위의 배후 단체 중 하나인 ‘프리덤 펀드’는 억만장자 교육부 장관 벤티데보스 일가의 참모가 설립한 단체다.”

현재 미시건주 · 위스콘신주 · 미네소타주 · 일리노이주 · 인디애나주 · 켄터키주 주지사들은 주 경제를 재가동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이 주들의 경제 규모를 모두 더하면 미국 총생산량의 약 16퍼센트에 이른다.

4만 1000명

4월 21일까지 미국에서 4만 1000명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다고 집계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TV 방송사 CBS의 기자 웨이지아 장이 트럼프에게 [코로나19의 위험성] 경고 시기를 놓친 이유를 묻자, 트럼프는 “조용히 하라”고 대꾸했다.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시작됐으니 미국이 조만간 조업을 정상화할 수 있으리라고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의구심을 표하며, 미국이 조업을 정상화하려면 매일 2000만~3000만 명을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의 무모한 계획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파업이 여러 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시카고 맥도날드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지난주 50곳이 넘는 식당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에 항의해 작업장 이탈 시위를 벌였다.

이번 주에는 미국 곳곳에서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 수백 명이 병가를 내고 집단 결근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300명 이상의 아마존 노동자가 4월 21일(현지 시각)부터 결근하기로 결의했다고 노동자 지원 단체 ‘존중을 위해 단결하자’(United for Respect)가 밝혔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마스크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던 창고 노동자 체온 측정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병수당 지급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이냐를 두고도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뉴욕시 시장 빌 드 블라시오는 약 6억 5000만 파운드[한화로 약 9800억 원] 규모의 교육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노동조합들은 이런 삭감을 용납할 수 없다며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1호
번역 김준효

▶ 8면에서 이어짐

국제적 자본이 현재의 파편화된 국가별 대응을 극복하고, 자본의 주요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이윤과 국제화된 생산을 지속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구조체는 또한 체제 중심부 인구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질병이 불황을 일으키는 촉진제 구실을 하긴 했지만 질병 그 자체가 근본적 원인은 아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모종의 새로운 국제 공중보건기구를 창설하면 세계무역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국가들이 사회의학에서 언제나 핵심 주제였던 전 세계적 규모의 고통

과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자신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믿는 한은 그럴 것이다.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백신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럴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설사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가 두 부류의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물론 부유한 국가 내부에서도 그런 분단이 나타나고 있다. 질병이 인종차별의 유산과 빈곤 때문에 왜곡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최소한 미국에서는 진보적 의제, 즉 의료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유럽식의 포괄적 의료제도를 주장할 절호의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 제약회사

를 해체하고 의약품 대량 생산을 국유화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주장을 내세울 기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독점기업으로 등장했다. 아마존이 스스로 필수 공익사업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진보파의 대응은 아마존을 해체하거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요구를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바로 아마존을 공기업으로 전환해 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소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위기는 좌파적 개혁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적 사상과 요구를 내세울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1호
번역 이예송 김수 천경록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레닌과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지금, 150년 전 4월 22일에 태어난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생애와 사상에서 배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토마시 텅글리-에반스가 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기후변화, 세계 경제 침체, 코로나19 대유행, 핵전쟁 위기 등으로 점철된 재앙으로 돌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150년 전 4월에 태어났지만, 그의 사상은 썩어빠진 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닌에 대해 왜곡된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왜곡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다. ‘레닌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독단적인 독재자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끔찍했던 소련은 레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레닌의 정치는 체제가 지금처럼 심대한 위기에 빠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경시하던 시기에 형성됐다.

레닌은 전례없이 제기된 문제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들을 발전시켰다. 그 사상들은 체제에 맞선 전투 속에서 시험받았고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원래 레닌은 유럽 사회주의 정당 운동의 일부로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했다.

그러나 레닌의 정당 볼셰비키만이 1917년 러시아에서 노동자 혁명을 성공시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레닌은 전쟁, 제국주의, 국가 문제와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붙잡고 씨름했다.

결정적으로 레닌은 사회주의자들이 세계를 바꾸려면 혁명적 조직을 건설해야 함을 인식했다.

노동계급 대중과 기업인들 사이의 충돌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특성이다. 대규모 항쟁과 혁명도 그 시작은 구체적인 쟁점을 둘러싼 자발적인 투쟁인 경우가 흔하다.

러시아의 1917년 2월 혁명은 빵 배급 부족에 대한 항의로 시작됐다.

최근 철레에서 분출한 반신자유주의 항쟁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항의로 시작했다. 이란에서는 연료비 인상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도전

이런 투쟁들은 체제에 대한 더 광범한 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도전이 승리를 거두는 것만큼은 결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투쟁에서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를 제한하려는 개혁주의 세력과 혁명적 변화를 원하는 세력 사이에 투쟁이 벌어진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레닌이 주장한 혁명적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직전을 떠올려 보면, 세계적으로 항쟁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예컨대 수단에서는 대중 운동이 성공적으로 독재자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를 쫓아냈다.



레닌은 제국주의, 차별, 국가 등 전례없이 제기되는 현실 문제와 씨름하며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후 그 운동은 거리에 모여 군부 통치 종식을 요구했다.

운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일부 광장에서는 혁명위원회가 등장했는데,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운영되는 민주적 사회의 잠재력을 언뜻 보여 줬다.

많은 노동자 단체들이 수단 항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 동학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면 정권을 퇴진시킬 수도 있는 노동자 평의회를 건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영향력 있는 친기업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당시 이렇게 썼다. “1917년 러시아에서 차르가 쫓겨날 때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019년 4월 [수단의] 수도 하르툼과 비슷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단에서는 1917년 10월 러시아처럼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다.

수단에서는 그럴 의지가 시종일관 없었던 정치 세력이 대중 운동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으로 기존 정권과 합의했고 그 덕분에 정권은 정적을 탄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타협에 반대하고 혁명을 심화시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 수단에는 없었다.

레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혁명적 정당을 만들려는 생각이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1902년 레닌이 어떤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지 설명하려고 쓴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증거로 제시한다.

거기서 레닌은 이렇게 썼다. “계급적 정치 의식은 오직 노동자들의 외부로부터 도입될 수밖에 없다.” 얼핏 보면 마치 사회주의자들이 운동 내 나머지 부분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고 노동계급에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라는 식으로 들린다. 그러나 레닌의 주장은 그게 아니었다.

레닌의 글들은 많은 경우 당시 운동에서 제기되는 아주 구체적인 논쟁 속에서 쓰였다.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쓴 시기는 “경제주의자들”과 격하게 논쟁하던 때였다.

경제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 같은 경제적 쟁점을 놓고 싸우다보면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레닌은 “그런 경제주의는 노동운동이 부분적 이익만을 좇도록 체계적인 굴레를 씌운다”고 비판했다.

레닌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호민관”이 돼야지, 그저 “노동조합 위원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다른 대목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압제와 차별이 벌어지는 모든 일에 맞설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항상 일반화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착취와 차별을 양산하는지 다른 노동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레닌은 썼다.

투사들의 조직

혁명적 정당은 노동계급이나 대중 운동과 분리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급의 투쟁적인 사람들, 여러 투쟁을 하나로 연결해 체제 전체를 겨냥한 더 큰 싸움으로 만드려는 사람들

을 단일한 조직으로 모으는 것이다.

당면한 정치 상황에 따라 혁명적 정당을 조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르고 또 혁명적 정당의 구체적 특징에 관해서 레닌은 유연한 자세를 견지했지만,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든 권위주의 국가 하에서든 혁명적 정당이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보편적이다.

혁명적 정당의 필요성은 노동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하다는 데서 비롯한다. 노동계급 안에는 자본주의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체제에 기꺼이 빌붙는 반동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다수는 진보와 보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영국 노동당 같은 개혁주의 정당들에는 그런 각종 모순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그 정당들은 후진적인 사상에 영합한다. [이와 달리] 혁명적 정당은 가장 투철한 투사들로 이뤄진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조직이 혁명 와중에야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레닌의 볼셰비키당은 1905년과 1917년에 혁명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건설됐다. 그동안 각종 관점을 검증해 보고, 실수도 저질러 보고, 교훈을 얻고, 노동계급 운동 안에서 신뢰를 쌓았다. 또한 볼셰비키는 노동자 투쟁에서 배웠다. 1905년과 1917년 혁명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비에트, 즉 노동자 평의회를 만들었다.

레닌은 소비에트가 “혁명적 권력 기관”임을 알아차렸다. 1917년 10월에 이르르면 레닌은 소비에트가 새 노동자 국가의 기초가 될 것임을 단연 강조하면서 이런 구호를 내세웠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레닌이 변함없이 혁명을 주장했던 이유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가 쓴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국가가 종립적인 기구라는 생각을 반박하며 이렇게 썼다. “국가는 계급 지배를 위한 기구이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누르기 위한 기구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자유는 없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국가가 있을 수 없다.”

선거와 의회는 (제약이 가해진) 민주주의를 일부 제공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은 압도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관료들로, 고위직 공무원, 판사, 군장성과 정보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레닌이 무장한 자들의 “특수 기관”이라 부른 경찰과 군대를 거느리고 물리적 폭력을 휘두른다.

이들은 기업들의 이익을 보살피고 그 기업들이 경제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내린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기존 국가를 활용해서 사회를 바꿀 수 없다.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민주적 기구를 만들고 노동자 혁명으로 그들 자신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레닌 시대 이후 국가가 변모해 왔지만 국가의 억압적 기능은 여전히 남아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진정한 사회주의적 혁명으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고 잠시 동안 스스로 사회를 운영했다.

레닌은 언제나 혁명이 여타 선진국들로 확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유럽에서 혁명적 물결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 결과 러시아혁명은 고립됐다. 14개 제국주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구질서를 회복하려는 세력을 지원했다.

이 내전 탓에 혁명을 만들어 낸 노동계급은 초토화됐고 소비에트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 결과 노동자 권력의 토대가 크게 훼손됐다.

볼셰비키는 거대한 관료들을 이끌어야 했고 남아 있는 혁명의 성과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눈물겹게 노력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주도한 반(反)혁명명은 그런 노력과 단절했다. 혁명으로 이룩했던 많은 사회적 성과, 예컨대 낙태 · 이혼 · 동성애 합법화 등이 모조리 후퇴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노동자 권력의 요소들은 폐지됐다.

1930년이 되면 스탈린이 이끄는 관료집단은 그들만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발전시켰다. 소련은 국가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서방과 경쟁했다.

이런 결과는 레닌의 사상이나 그의 독재적 야망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레닌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야만적인 체제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1호 / 번역 김중환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이정원

문재인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회적 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내달 열릴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은 재계와 노동계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는 데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안해 온 것이다.

총선 직후인 4월 17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했다. 이어 4월 18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나서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22일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제시한 '일자리 고용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물론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 투쟁 자체 등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 효율을 꾀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하고 금지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도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준 듯하다.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편이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4월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보다는 기업 지원에 초점이 있다. 기업 지원 액수를 더 늘려 총 23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돈은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고 금지에 아예 언급조차 없다. 더구나 기간산업(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지원 방안에는 "노사의 고통 분담방안"이 전제조건으로 달려 있는



탄력 받는 사회적 대화 재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극복'에 협력하지만, 이는 양보와 투쟁 자체 압박만 부를 것이다. 사진은 2018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주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등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잖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면 '악화하는 실업난,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에 235조 원 지원 ·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를 보시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 같은 대책에 기대를 드러낸 것은 문제다. 민주노총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는데, 정부가 이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높이 사 줬다(기간산업안정 기금 지원 시, 일정한 비율의 고용 유지를 의무로 부과하고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금지 등). 정부가 노동자 희생을 요구한 대목(임금 삭감, 고용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타협과 양보 메시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오랫동안 기저질환을 앓아 온 세계경제를 급격한 위기로 내몰면서 고용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 통계로 3월에 전년 동기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통상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30만~40만 개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일자리 60만 개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천지역 항공 · 공항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7만 1천여 명 중 14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정리해고를 목전에 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과 아시아나KO 노동자 수백 명이 대표적이다.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이스타항공에서는 임금을 절반이나 깎은 것으로도 모자라, 4월 24일 정리해고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제주항공 경영진이 발맞추어 임금 삭감, 무급휴직, 희망퇴직, 이스타포트와의 조업계약 해지, 80여 명의 수습 부기장 계약 해지 등 엄청난 희생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이스타항공종종사노조)

그런데 제주항공은 정부로부터 2000억 원에 이르는 인수금융을 지원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이상진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산업계 대표)이었고, 이번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처럼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쉬운 해고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온갖 개악 리스트를 내놓았고 최근에는 최저임금 동결도 주장하고 있다.

위기가 더 가속화될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공세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위기 해법은 바로 이런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정 타협은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고,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할 민주노

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낸다.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는 지금도 이미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사회적 대화 추진에 몰두해 시급한 해고 저지 투쟁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

게다가 사회적 대화 추진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는 게 아니라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월 16일 민주노총 중집은 정부에 노사정 협의를 제안하기로 하는 한편, 노동자대회를 열까감치 7월에나 하는 것으로 미뤄 두는 결정을 했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소규모 퍼포먼스로 대폭 축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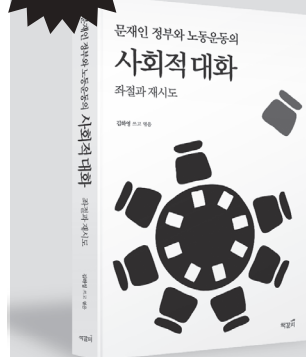
무엇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양보안을 내놓았다. '전국민고용보험제'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연대기금 조성 제안도 그런 사례이다.

이런 제안이 사실상 가리키는 바, 정규직이 양보해서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 자체는 정부의 양보 압박을 정당화해 주는 결과만 낳는다. 또,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같은 조건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을 위축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커지면 기층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 커지고 수동 화돼 공격에 맞설 힘은 더 약화되기 십상이다. 독일의 오랜 사회적 합의 '전통'이 낳은 가장 큰 폐해가 바로 이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조건은 개선이나 보호가 아니라 악화됐고 저임금 노동자가 급증했다.

좌파 활동가들은 사회적 대화(합의) 추진을 비판하며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조직할 태세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

신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쓰고 엮음, 책갈피, 228쪽, 12,000원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악화되는 실업난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게엔 양보 강요

정선영

코로나19 사태와 악화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에 비해 올해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5~64세의 고용은 39만여 명이 줄었다.

통상 취업자가 매해 30만~40만 명씩 늘어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취업자는 50만~60만 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는 23만 명가량 줄었다. 기업들 다수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취업자 통계에 포함되지만 무급이나 유급으로 휴직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26만 명이나 급증했다. 취업자 중 7퍼센트가량이 쉬고 있는 것이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7.4퍼센트가 줄어 160만 명가량 감소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3시간으로 1년 전보다 2.8시간이나 줄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과 소득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적금과 보험 해약률이 급증하는 것에서 보듯 많은 노동자·서민이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다.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고용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타격이 컸던 서비스업 등에 집중됐었다.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된 항공·공항 산업과 함께, 도·소매업(-16만 8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 9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 명) 등에서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출 제조업 등 한국의 기간산업들로도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4월 1~20일 수출은 27퍼센트 추락했다. 저유가로 인해 석유제품의 수출액은 53퍼센트 급감했고, 반도체 -14.9퍼센트, 승용차 -28.5퍼센트, 무선통신기기 -30.7퍼센트, 자동차부품 -49.8퍼센트로 상당한 낙폭을 기록했다.

5차 비상경제회의

이 때문에 총선 전 문재인은 고용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4월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정부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들을 위해 막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 원, 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을 위해 35조 원을 추가했다. 이로써 정부가 이제까지 발표한 기업 지원 규모를 합하면 무려 235조 원에 이른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 노동자 일자리



해고를 중단하고, 온전한 임금 보장하라 4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를 위한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하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구직급여 증액(3.4조 원) 등 실업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야 하는 돈이다.

이제까지 노동운동은 한시적 해고 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기업주의 선의에 기대게 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바꾸고, 특수고용노동자, 파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소외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라는 요구 등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했다. 한시적 해고 금지 조처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서도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크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은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기간산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 총량이 변동할 수 있다고도 해 해고가 가능하게 열어 뒀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기업 지원을 보면 기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연계시키겠다는 정부의 말이 위선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두산중공업에 지난번 1조 원에 이어 6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들이 해고 압박을 받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노동자 700백 명을 해고한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 대책도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

직자 등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 20만~3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가 2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공공·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일자리들은 대부분 임금이 100만 원도 되지 않고, 최대 6개월 동안 일하는 초단기 저임금 일자리들이다.

양보 압박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라고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들은 “합리적 고용조정 방안을 노사가 함께 제출”해야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 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전환배치, 순환·무급휴직, 임금 삭감 등”을 해야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고용유지 협약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가 임금 삭감을 수용하면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고용 유지를 하려면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계속 반복돼 왔다.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명목으로 공무원 인건비 7000억 원을 삭감했다. 얼마 전에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을 위협할 화학물질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08년 경제공황 이후 지난 10여 년간 불평등이 심화돼 온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기업에게 퍼 주는 막대한 지원을 노동자들을 위해 쓴다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부의 5차 비상경제회의의 발표에 대해 일부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도 총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성이 있다며 많이 사 주는 평가를 했다. 정부 대책이 노동조건 악화를 요구

하고 있는데 이에 내용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도 문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약’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에 힘을 쏟느라 기업 지원에 쏠려 있는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삼가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과 정부의 노동자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에 맞서 정부·기업주들과의 대화와 타협보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 강화에 강조점을 찍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 (특별재난강령)

2020년 3월 26일, 노동자연대

-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구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비용을 지급하고, 휴교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라.
- ⑥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공공시설 거주자들에게 긴급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
- ⑦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주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라.
- ⑧ 정부가 재난생계소득 100만 원을 즉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라.
- ⑨ 노숙인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라.
- ⑩ 특정 집단에 대한 속죄양 삼기를 중단하라.
- ⑪ 집회 금지 조처 등 정치적 억압 반대한다.
- ⑫ 상가와 주택 월세 납부 및 부채 상환을 유예하라.
- ⑬ 노동조합은 정부가 이런 요구를 채택하도록 광범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